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통합과 사회의 질

소극적 의미에서 사회통합은 갈등의 반대말이다. 그러나 갈등이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잘 통합된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는 정당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뜻한다. 사회통합이 지향하는 가치는 '기계적 균형'이나 '결과의 평등' 혹은 '평준화'가 아니라, 다양한 개인이나 지역들이 고유한 개성과 능력, 그리고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울려 '역동적인 조화와 상생'을 이루는 성숙함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는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우대립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 개인과 집단 간 이분법과 영합게임이 아니라, 자유와 질서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상생

의 과정에 대한 강조이다. 이런 이유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 통합은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의 질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간의 상시적인 긴장과 보완의 함수로서, 한편으로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가르는 축(행위자와 구조)과, 다른 한편으로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축(체계와 생활세계)을 교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체계와 생활세계를 가르는 것은 상호작용의 장이다. 행정이나 경제와 같은 공식적인 체계와 가족이나 공동체와 같은 비공식적 생활세계 간 긴장이나 갈등이 여기서 발생한다. 허버마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성의 진전은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 속의 감정이나 소통, 그리고

개인의 소중한 가치들이 거대한 시스템의 효율성 논리에 의해 압도될 때 소외와 박탈감이 증대된다. 반대로 생활세계에서의 여러 갈등이나 개인들의 참여가 체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쳐 제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승인'의 과정이다. 또한 체계와 제도가 일상생활 속에 수용되는 과정은 '이질성이 통합되고 타협되는 것'으로서, 체제의 정당성이 일상성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 이질적인 이해와 갈등 등이 해소되고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와 구조를 가르는 수직축은 사회성이 구성되고 발현되는 장이다. 사회의 가치와 규범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지만, 동시에 개인들의 행위나 가치지향은 거시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 개인의 자기실현과정은 (가족, 공동체, 기업, 제도 등과 같은) 집단 정체성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집합적 정체성 형성 간에는 쌍대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즉, 사회적 규범은 개인들의 선택과 행위의 결과로 구성되고 발현되는 집합적 속성이지만, 동시에 개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범적 강제력

을 갖는다. 사회 발전과 개인의 생애 발달은 때로 서로 갈등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만 방점이 찍힌 사회는 지나친 불평등이나 배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사회의 안전이나 응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에 강력한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질식된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 혹은 개인과 사회간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사회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에서 지향하는 규범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인,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들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이 제안한 규범적 가치는 분배적 정의로서의 형평성, 연대감, 평등한 가치, 그리고 인간적 존엄성인데, 각각은 구성요소로 본다면, 인간안보, 사회적 승인, 사회적 반응,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리고 각각의 가치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그리고 사회적 역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가능한가를 의미하며, 사회적 응집성

표 1. 사회의 질의 규범요인, 구성요인, 조건요인

규범요인 (윤리/이념의 차원)	구성요인 (자원의 차원)	조건요인 (인간행위차원)
사회정의(형평)	개인(인간)안보	사회경제적 안전성
연대감	사회적 승인	사회적 응집성
평등한 가치	사회적 반응	사회적 포용성
인간적 존엄성	개인의 역량	사회적 역능성

(social cohesion)은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를,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복돋워지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네가지 차원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통합이 잘 된 공동체란 위험사회가 아닌 '안전사회'를, '불신사회'가 아닌 '신뢰사회'를, '배제사회'가 아닌 '포용사회'를, 그리고 '무기력사회'가 아닌 '활력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 개념은 폭넓게 정의하자면 사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인간적 삶을 위한 물질적 환경적 자원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빈곤, 질병과 재해, 실업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기초적 욕구들이 충족되는 사회가 '안전사회'라면, 그렇지 못한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객관적 차원의 '안전과 위협'은 주관적 차원에서는 '안심과 불안'에 대응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일자리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 사회적 응집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하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연대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신

뢰의 수준, 그리고 사회의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의 수준, 이타심, 시민적 참여의식, 다원주의와 관용성 등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연대감과 일반화된 신뢰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회, 그래서 사회적 응집력이 유지되는 사회를 '신뢰사회'라고 한다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적 규범의 일관성과 포괄성이 지지되지 않으며, 집단간에 이기적 경쟁만이 존재하는 해체된 사회를 '불신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특수주의적인 연고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넘어서 보편적인 신뢰, 그리고 사회규칙의 보편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일자리의 배분과 세금을 둘러싼 공평한 부담, 세대간 분배적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나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차원을 구성한다. 사회적 포용성이란 사회성원들이 지닌 가치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가 사회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포용사회'에 대비되는 사회는 '배제사회'라고 할 것이다. 사회적 포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률, 남녀간 임금격차나 공직 진출률의 차이, 노동시장 내 장기실업자의 비율과 비자발적으로 차별받은 비정규직의 비율, 노숙자 수, 사회보호시설 수감자수, 이웃이나 친구, 친지와의 접촉의 빈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가 짜여져 있는가를 보는 지표로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적

인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다양한 기량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포괄하는데, 정치적인 의무에 따르는 권리라는 형식적 차원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정치적 과정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도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문자해독률이나 신문, 인터넷, 문화예술시설의 활용정도, 각종 투표율과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정도,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인 의사결정기제의 존재유무,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의 포괄성,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의 규모, 정신병 유

병률이나 자살률 등을 근거로 한다. 개인의 능력발휘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활력사회'로, 그리고 그 반대를 '무기력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는 1) 모든 국민들이 실업, 가난 등의 경제적 위험이나 질병,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심사회'이며, 2)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삶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포용사회'이고, 3) 예외적인 반칙을 허용하지 않는 투명한 규칙에 대한 믿음 위에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사회'이며, 4)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활력사회'라고 할 수 있다. 